데스크시각

김 재 열

인구 주는데 '광전연' 분리라니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을 집대성했던 한비자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 맬서스보다 2천년 앞서 인구론을 설파했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증가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한비자의 논지였다.

반면 인구야 말로 국력의 상징으로 믿었던 통치자들도 많았다. 모택동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머리 수가 압도적인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인구늘리기 '백약이 무효'

우리나라도 80년대 초까지 강력한 출산 억제책을 펴오다 이제는 정반대의 출산 장려책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공약이나 중요 시책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올해도 전남지역 단체장들은 일자리 창출과 명문학교 육성 등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인구 200만명 붕괴 이후 인구 감소에 속수무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인구는 125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1970년 659만명으로 전국 대비 20.4%를 차지했던 호남지역 인구비중은 지난해 10%선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지역 발전에 치명적이다. 교부세 감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실 정치에서 지역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호남인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부터다. 인구나 경제 규모에 있어서 절대 열세인 호남인들이 전라도 몫을 찾기 위해서는 뭉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움직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이 광주·전남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과 한 배를 타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중앙의 한 보수신문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소리 문화의 전당 소재지를 '전남 전주시'로 오보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적지 않다. '단순 오기(誤記)'가 아닌 타 지역에서 호남 주체를 광주·전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이라는 논조의 칼럼이 전북지역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

통합과 상생은 생존을 위한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대구·경북이 민선 4기 이후 경제회생을 위해 선택한 카드는 양 지역의 경제 통합이다. 이미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경북도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확장에 공동 투자를 결정하자 대구시는 경북도 출자회사인 경북통상에 6억원 투자로 화답했다. 양 지역은 각각 14억원씩 출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회사인 대경창업투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생 외면한 광주·전남

반면 언제부터인지 광주·전남은 따로 따로다.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하고 양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공동 출자로 설립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마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채 시장·도지사의 합의로 분리를 결정했다. 경제적 기반이 빈약하고 한 뿌리인 광주·전남이 제각각 다른 길을 가자는 것인지 지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독자 권역을 설정할 경우 중앙 무대에서 호남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호남의 상생과 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얘기가 아니다. 정치적 소수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 몫을 찾기 힘들다. 현실정치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경영난맥 '전남무역' 존폐문제 검토하라

전남도가 출자한 전남무역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무역은 덴마크 등 유럽산 돼지고기를 수입해 일본에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해왔으나 일본 측 수입업자에게 149억원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전남무역을 대신해 유럽지역 돈육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했던 3개 주요 은행이 전남무역과 거래를 정지했다고 한다. 수입결제 채무액도 122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무역 스스로 자금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다.

이번 기회에 전남무역의 존폐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남무역의 경영 행태는 그동안 지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양란의 수출을 위해 중국에 만든 수출전진기지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횡령의혹이 이는 등 경영에 숱한 난맥상을 드러냈다.

문제가 된 중계무역만 해도 그렇다. 전남무역이 도내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돼지고기와 참깨, 조기, 바지락까지 수입해 중계무역에 나선 것은 아무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설립목적에 어긋난다. 경영 잘못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말썽을 빚은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전남무역은 이미 기업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 미봉책으로 해결하기에는 경영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경영손실을 도민들이 떠안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전남무역에 책임경영제 강화나 조직 축소 등 경영 혁신,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등을 주문하기에도 지쳤다.

이런 상태에서 전남무역을 존립시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행착오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으로 충분하다. 전남도는 총체적 경영진단을 통해 청산 절차를 밟든지, 민간에게 이양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 남발 경제 위기 부추긴다

정부가 중·대형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대책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것만 9번, 작은 것까지 40여 차례의 대책이 나왔다.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세금폭탄, 대출 제한, 분양원가 공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동원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의 남발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에만 매달려 정책 수단을 허둥지둥 구사하다가는 경기 경착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주택경기와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산거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강도높은 금융규제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를 빠른 속도로 회수한다면 가계부실과 기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정체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동반된다면 일본형 장기 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혼란, 개인파산자와 신용불량자 양산, 금융기관 부실화, 기업파산 급증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대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방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방경제에서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방실정에 걸맞지 않은 부동산 대책의 남발로 지방경제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도박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대책에만 파묻힌 나머지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은펜칼럼

정 명 철

마을 숲 문화를 복원하자

얼마 전 해남 땅끝에 다녀왔다. 정확히 말하면 땅끝마을로 알려진 갈두마을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너머에 있는 갈산마을에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산마을에서 당굿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 그대로 '굿보러' 땅끝에 간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굿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갈산마을은 송호해수욕장 주차장 끝에서 이어지는 좁다란 산길을 구불구불 따라가다, 도무지 마을이 있을 성싶지 않아 불안해질 즈음에야 불쑥 얼굴을 내민다. 주민이래야 고작 여덟 가구뿐이지만, 마을 앞에는 자그마한 포구도 하나 있다.

겨울 바다에 포위된 포구는 무척 위태로워 보였다. 성난 파도는 자맥질을 되풀이하면서 방파제를 위협했고, 방파제를 넘어온 바람은 포구에 정박된 선외기들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마을로 불어 닥쳤다. 하지만 파도와 바람은 포구와 마을 사이에 조성된 후박나무숲에서 소멸하고 만다.

그날 갈산마을에서 당굿을 하게 된 사연도 마을주민들이 '당숲'이라 부르는 이 마을숲 때문이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호남지회에서 난대림 생태모델숲 복원보전 시범사업을 하면서 갈산마을 주변의 숲을 원산림 생태계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이 당숲과 그 안에 있었던 당집 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한국산지보존협회 호남지회에서는 난대림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당숲과 당집까지 복원했으며, 1959년 사라 태풍으로 당집이 무너질 때 떠난 당할머니를 다시 모셔오는 당굿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당집을 복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갈산마을 앞 바다는 옛날부터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만 지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여 어부들이 '사자(저승사자) 끝'이라 부를 정도였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배는 꼭 갈산마을 당집에 들러 당할머니에게 제를 올리고 갔다고 한다. 윤선도가 말을 탄 채 당집 앞을 지나가다 말다리가 부러져 그 후로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는 이야기, 담뱃대를 물고 지나가면 담뱃대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이야기, 제주도 해녀들이 당숲의 나뭇가지로 밥을 해먹고 급살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굿은 방파제와 당집 앞에서 진행되었다.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무속인들의 신명을 꺾지는 못했다. 주민들도 5시간가량 진행된 굿판을 떠나지 않고 콧물을 연신 훔쳐내며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뎠다.

따지고 보면 마을숲은 우리네 전통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이었다. 바람과 파도와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고, 풍수지리적으로는 수구막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자원으로서 마을숲을 보존, 복원, 활용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미하다. 그래서 갈산마을에서 보여준 한국산지보존협회 호남지회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들은 숲만 복원한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까지 복원한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영영 잃어버릴 뻔했지 않은가.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석사과정 ·2005년 9월 수상자 〉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박 상 하

행복마을이 우려되는 이유

전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행복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소비자의 선호도와 지역적 차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농촌지역 노인은 심리적 선호와 자신이 살던 지역적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이주발상은 넌센스다. 실태조사 결과 96%가 현 거주지를 고수하고 4%만이 행복마을로 이주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대도시의 미분양사태가 농촌지역 행복마을로 변질될까 걱정된다.

문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난맥과 이중성에서 찾아야 한다. 농촌과 노인문제를 해결할려고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부처간 중복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복마을 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등 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유사하다. 또 신활력사업이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아류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라면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지역이 전남이다. 이러다보니 노인문제를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시급하다고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기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이나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작년까지만해도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을 각 시군마다 설립할려고 할때 빈약한 재정을 이유로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최근엔 각 시·군마다 실버타운 건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공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복을 피하고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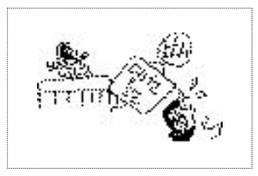
전남은 대도시처럼 인구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넓은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권역별 시범운영시설을 집적화하고 전문화하되 재가복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노인관련 사업주체와 운영은 각 시군이 하고 도는 종합적 배치와 조정, 민간자원 유치와 종합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프로젝트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수 해양도시 안에도 노인을 위한 유사한 계획들이 있어서 전문화와 차별화가 중요하다. 다만 농촌지역 노인 때문에 행복마을이 탄생했다면 오히려 재가복지를 네트워크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현재 죽어가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살리고 행자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재가복지시스템과 연계하면 자연마을이 행복마을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도 협의와 조정에 실패하면 못한다. 또 한가지 유념할 일은 현재의 노인은 미래의 노인과 다르다. 현재의 노인은 개발 독재시대를 지나 가난에 시달리고 구매력이 미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미래의 노인은 학력과 구매력, 경제력이 풍부하여 소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소비자로 등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료매뉴와 단일한 서비스로는 포용하기 힘들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연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보아야 하는것과 같다.

〈나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無 等 鼓

역발상의 기업



지난해 말부터 연초 들어 민간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경제전문기관들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어려웠지만 올해 경제도 결코 순탄하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가와 환율 불안 등 대외적 여건 이외에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개헌공방을 비롯 정치 싸움에 몰두할 뿐 경제는 도무지 챙기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경제난 속에서도 저성장 산업군 중 일부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한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그 비결을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성공한 기업들은 도전정신을 발휘, 게임의 룰을 바꿔 시장을 선도하고, 과감한 M&A 등에 나서며, 발빠르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 저성장 산업환경을 극복한 기업은 모두가 아는 게임의 룰에서 발상을 전환해 경쟁법칙의 창조자가 됐고 시장을 선도했다.

한국야쿠르트의 예가 대표적이다. 산업평균 매출증가율이 0.4%인데 비해 매출증가율 6.7%, 영업이익률 9.6%의 높은 성과를 거뒀다. 대표 브랜드 '윌'과 '쿠퍼스'의 성공 덕택이다.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존 경쟁법칙을 무너뜨리고 위, 간 등 유산균음료의 부위별 기능성을 강조해 발효유 업계를 기능성 음료 시장으로 바꿔 놓았다.

벤처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했다. 과감한 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성장동력을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경쟁사들보다 빨리 해외시장, 특히 성장세가 높은 신흥시장을 찾아 나섰다.

결국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성숙산업이나 사양산업은 없으며, 기업가의 역발상과 도전의식이 기업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일깨워 준다. 이런 기업가 정신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줘야 할 정부가 요즘에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오로지 정치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씁쓸함이 앞선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구급차·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 발휘하자

중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구급대원의 마음은 한없이 바쁘고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으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적색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를 조심스럽고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특히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이 가장 조심하는 곳이 교차로인데,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도 진행하거나 심지어 녹색불이 켜지기도 전에 출발하는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서행으로 진입하고 있어도 구급차 앞을 위협하듯이 지나가는 차량도 종종 볼 수 있다.

조그마한 배려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자. ▲최영호·나주소방서

사정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물 보상금 약관 고쳐져야

97년식 1천500CC급 승용차를 갖고 있다. 10년 전 이 차를 사려고 현금자산을 모두 쏟아붓고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낡고 오래된 차지만 내겐 소중한 자동차여서 소모품은 정비사들이 더 사용하라고 권유해도 사용 매뉴얼에 나오는대로 고지식하게 바꿀만큼 애지중지 해왔다.

그런데 얼마전 국도에서 아내와 함께 큰 사고를 당했다. 길이 막혀 서행하는데 뒤에서 달려온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내 차는 수리비 견적이 280만원이나 나왔다. 당연히 가해차량 쪽에서 차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해차량 쪽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라는 사람이 병실로 전화를 해서는 차값으로 60만원을 쳐 주겠다고 했다. 중고차시장에서 내 차값이 그 정도라는 거였다. 자비를 들여 나머지 수리비를 대든지 폐차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부서진것도 억울한데, 가해차량과 보험사의 자기들끼리의 계약인 약관 때문에 하루 아침에 내차가 폐차를 해야될 상황이라니. 이런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물 보상금을 매기는 약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